

투데이 칼럼

판소리는 촛불집회다!

판소리는 특정한 놀이나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는 '판'에서 인간의 가장 심층에서 울리는 본연의 외침과 민중의 수많은 희노애락 사연을 '소리'로써 나타낸다. 또한 소리꾼과 청중의 적극적 참여로 완성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소리'를 이 시대의 '촛불 집회'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적어도 조선 후기에 불려진 판소리와 촛불집회는 같다고 생각한다. 판소리와 촛불집회의 유사점 몇 가지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걸모습이 닮았다. 민중들이 모인 판에서 창자(唱者)가 창노래(唱)와 아나리(謠)를 하고 고수(鼓手)가 북을 두드리면 많은 청중이 추임새를 넣는 것은 판소리의 전통적 모습이다.

이는 군중이 모인 넓은 광장에서 한 사람이 무대에 나와 부패 정권을 비판하고 옆에서 북을 치면 다 같이 '정권 퇴진!'이라 외치는 오늘날 촛불집회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리고 판소리는 '노래'를, 촛불집회는 '촛불'을 앞세운 것은 비폭력 추구의 동일 모습이다.



전민중

고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둘째, 속 내용이 닮았다. 판소리와 촛불집회 모두 저항의 내용들이 들어갔다. 가장 예술성 높다는 <춘향가>를 비롯한 많은 판소리 작품에서 사회 약자인 일반 민중들이 권력자에 느꼈던 감정,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태호 이사장(사)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순천협회)은 판소리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록에 심혈을 기울였던 분이다. 그는 "판소리가 저항의 소리임은 틀림없는데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저항성이 70%, 예술성이 30%"라고 말한다.

셋째, 성질이 닮았다. 판소리와 촛불집회는 난세(亂世)를 만날수록

더욱 불타오른다. 실제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의하면 삼정의 문란(三政一紊亂)과 탐관오리(貪官汚吏)로 대표되는 순조에서 고종에 이르는 시기에 명창 반열에 오른 이가 70~80명 될 정도로 조선 후기 판소리는 활황기를 맞았다. 이러한 판소리가 부흥한다는 것은 민중의식의 성장을 의미한다. 또한 시대의식이 높아진 민중은 혁명의 주체가 된다.

조선 후기 판소리를 전성기로 이끈 이를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동리 신재효이다. 그는 판소리가 널리 불려질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판소

리 사실 개작을 통해 양반에게도 소비층으로의 참여 명분을 줌으로써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창자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신재효의 문하를 거쳐간 명창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이들 명창 중 조선 후기 팔명창에 속하는 사람들 대부분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민중의 시대의식을 높였다.

위와 같은 전반적 내용을 고려할 때 조선 후기 '판소리'는 '촛불 집회'라 할 수 있다. 또한 판소리가 쉽 없이 울려 퍼졌던 고창의 '동리 정사'는 촛불집회 중심지인 '광화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있고 촛불역량이라 할 수 있는 판소리를 더욱 발전시켜 고창이 의창(義倉)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새만금 태양광사업, 이쪽의 이익도 생각해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 주문했던 것이니 새로운 언급은 아니다. 새만금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이제 우리 쪽 이익도 생각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업체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전북도와 먼저 협의해야겠다. 그리고 전북도도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할지 사전에 그 방향을 연구해 두어야겠다.

새만금 사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 세월이 너무나 오래이다. 사업 초기부터 그랬으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관계자들은 발상의 전환을 보여야 한다. 예전 방식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전북도와 정기적으로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새만금 추진에 있어 전북의 이익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본래 구상했던 사업에 비하면 마땅치 않은 태양광 사업인데 그나마 외지 대기업들의 잔치상이 될까 우려스럽다. 지금 군산의 도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것이다. 왜 아니 그러겠는가. 그동안 알짜배기는 외지 대기업들이 다 챙겨 먹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새만금개발공사는 잘 생각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전북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늘 중심 주제로 삼아 달라는 당부이다. 여기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이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해 달라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불झ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가 말이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외지업체들의 잔치상이 되게 할 수는 없다. 도내 업체들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문을 더 크게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을 도내 업체들은 바라고 있다. 비록 외지의 큰 기업들보다 능력이 작다고 해도 그것은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사업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사업을 주관하는 이들은 그 기여할 부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지역의 업체들에게 보다 기회를 더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고용 불안정 문제 지속적인 관심사 돼야

고용 불안정이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도 전북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 고용 불안정 문제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데다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으니 난감해 할 거라는 걸 도민들이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도 전북도가 고용 불안정 문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다. 지역 청년들의 출항이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를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고용을 최저라는 성과표가 변함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북도와 지역의 기성 세대가 너무 조용하다.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젊은이들만 죽어나고 있지 않다. 정말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마땅한 오늘날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도 지적했지만 지난해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전북도는 지역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으니 별일이다. 미취

업 젊은이들이나 비정규 직장에 있는 젊은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감각이 둔한 탓이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답답할 거만 하다. 전북도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겠다. 물론 도내 모든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데다 그런 일자리나마 오히려 줄어들면 현실이 안좋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물론 청년 실업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전북도의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청년 고용 불안정 문제는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 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독자제언

112 허위·장난신고 절대 안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신고112'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누구든지 긴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국번 없이 112를 누르면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고통을 처리한다.

하지만 이처럼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에 허위, 장난 신고로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거나 치안공백을 초래하여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립들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에는 20대 유튜버가 개인 인터넷 방송 시청률을 위해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군, 경찰, 소방관 등 50여명이 출동하여 2시간이나 수색한 사건도 있었다.

1,837건이지만, 2017년에는 4,192건으로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기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서는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허위, 장난 신고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최혜진 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양귀비 재배는 엄연한 불법!

경찰은 UN에서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하고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 밀 경작행위를 단속하고 마약류가 미치는 환경, 중독, 행동장애 등 폐해성에 대해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및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양귀비는 동의보감에 진통, 진경, 위장병, 뇌염, 마비, 진정 등에 사용됐다고 기록이 되어있을 정도로 진통과 진정 및 호흡기와 소화기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과거에 양귀비를 민간요법의 치료제로 재배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아직도 양귀비를 민간요법 치료제나 관심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양귀비의 경우 열매에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양귀비 재배는 금지되어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고 단 1주의 양귀비라도 재배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5주 이상 재배 시 수거대상이 된다.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밀매 혹은 사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